

10일 Market Index			
↓ 코스피	2701.17	↓ 코스닥	864.71
	(-21.50)		(-1.47)
↑ 금리 (연이자율)	3.353	↑ 환율 (원/달러)	1376.00
	(+0.045)		(+10.70)



시험대 오른 서울 분양가... 강북도 국평이 12억 넘어

〈전용면적 84㎡〉

장위6구역 평균분양가 3507만원
2년 전 고분양 논란 때보다 2억 ↑

정비사업 공사비 부담 분양가 전가
업계 “당분간 상승세 지속될 듯”

그간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서울 분양시장이 시험대에 올랐다. 부동산 경기는 아직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강북에서도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줄줄이 12억원대를 넘어서면서다.

신축임을 감안해도 주변보다 비싼 시세에 시장에서 원활히 소화될 지도 미지수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정비사업 단지마다 공사비 급등에 따른 부담을 분양가로 전가하겠다는 분위기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은 6구역(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재개발조합은 최근 3.3㎡(평)당 평균 분양가를 3507만원으로 책정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했다.

서울은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위 6구역은 고분양가 심사 대상이 아닌만큼 최종 분양가는 조합이 책정한 분양가와 큰 차이 없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반분양 물량은 총 718가구다. 전용면적 84㎡는 10억4000만원에서 최고 12억1100만원선, 59㎡ 분양가는 8억2600만~9억4800만원선으로 전

해졌다. 지하철 1호선·6호선 석계역 바로 앞에 들어서는 초역세권 단지라고 해도 20평대 분양가가 10억원에 육박하고, 12억원선을 넘어선 30평대 분양가는 사실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주변 시세 대비로도 분양가가 높다. 지난 2022년 12월 분양한 장위4구역(장위자이 레디언트)의 경우 3.3㎡당 2834만원으로 분양했다. 국평의 최고 분양가가 10억2300만원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에도 고분양가 논란에 대거 미분양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무순위 청약과 선착순 분양으로 물량을 털어냈다. 오는 2025년 3월 입주 예정이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입주한 래미안 장위 포레카운티, 래미안 장위 퍼스트하이, 꿈의숲 아이파크 등 인근 신축의 시세도 국평이 9억원에서 11억원 사이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2년 전에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장위4구역도 지금은 입주권에 웃돈이 붙어 거래가 되고 있다”며 “장위6구역은 입지가 더 좋은만큼 물량이 천천히 소화되더라도 입주 전까지는 무리없이 분양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장위자이 레디언트 전용 84㎡는 입주권이 지난 3월 최고 분양가보다 2억원 가까이 오른 11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 원자재와 인건비 등 공사비가 상승세가 이어



해외 순방길 오르는尹 대통령 부부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을 국민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뉴시스

지고 있고, 땅값도 많이 올랐다.

흥제3구역 재건축 조합이 최근 조합원에게 공개한 일반분양가는 3.3㎡당 평균 4250만원대로 국평이 15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54.85(잠정)다. 지난 2021년 3월 126.14와 비교하면 22.7% 상승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조규홍 장관 “엄연한 불법적 행위
비상진료 강화 등 모든 대책 강구”

오는 18일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비해 정부가 동네병원에 진료 명령 및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다. 집단 휴진을 유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대교수단체까지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어 집단 휴진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의협은 전일 의대교수, 개원의, 봉직 의,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총과업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집단 휴진 의지를 밝혔다. 공개된 투표 결과에 따르면 총 유권자 11만1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63.3%로 집계됐다. 투표 인원 중 90.6%가 강경한 투쟁에 대해 찬성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18일 대규모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 환자

단체,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다”며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다.

조 장관은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라며 “또한 집단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국 의대 교수단체도 집단 휴진 동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협 결정에 따라 18일 하루 휴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오는 12일 정기총회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동해 심해 광구 재설정... 재정 부담 최소화”

산업부 “효과적인 투자유치 도모”
유망구조 위치·형태 감안 재설정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효율적인 투자유치와 개발을 위해 기존 설정된 광구를 다시 설정하기로 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가스전 개발 특성을 감안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동해 심해는 8광구, 6-1북부, 6-1중동부 등 3개 광구가 설정돼 있으나 유망구조 도출 이전에 설정된 광구로서 투자유치와 개발에 최적화되지 않았다”며 “도출된 유망구조의 위치와 형태를 감안해 광구를 재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석유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광구를 정부에 반납하고, 정부는 유망구조에 맞춰 석유공사에게 광구를 재설정한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월 중 산업부장관 주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하고 해외투자 유치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비용절감과 위험요인 완화 차원에서 투자유치 시점, 매각지분율, 유치 방안 등 투자 유치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재설정된 광구별로 외국인 지분참여 여부와 참여 수준, 시기 등 단계적 투자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해 탐사 성공률 추정치 20%

와 관련 “금세기 최대 심해유전인 ‘가이나나’ 유전도 시추 전 예상한 탐사 성공률은 16%에 불과하다”며 “가이나나 유전을 예측한 아브레우 대표가 이번 동해 가스전을 분석한 것이며, 타 전문가들도 성공률이 20%면 충분히 시추할 만하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호주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 철수 논란과 관련 최 차관은 “가망이 없어서 철수한 게 아니고, (이 회사가) 인수합병하면서 사업을 재조정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철수가 가망없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국힘, ‘원구성·이화영·김성숙’ 민주당 맹폭
/사진 뉴시스
▲시민단체, ‘영일만 석유 시추 자료’ 정보공개 청구

▲정부, 개원의에도 ‘업무개시명령’ 방침
▲합참 “9일 살포 북 오물풍선, 310여 개 식별”



▲황우여, 민주당 원 구성 강행에 “헌법에 맞지 않아”
▲이재명 ‘6·10 37주년’에 “국민 무시한 권력 오래 가지 못해”
/사진 뉴시스